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0 | 2026. 9. 21. (2026. 9. 14. ~ 2026. 9. 2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지적에 대해 농지법 위반 시에도 충분한 자진 처분 기간 및 유예 기회를 부여 중이고, 올해 농지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반면 실거래가격 하락 폭은 둔화했다는 등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그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 규제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유형별 인증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고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는 바, 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건축·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안태준의원 등 12인)**」 ,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등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농림축산식품부) 8
-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발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행정안전부) 11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1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11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11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2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2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재산처)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보건복지부) 1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법규명령기본법안(김형연의원 등 12인)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4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의원 등 14인)·····	2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0인)·····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2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28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안태준의원 등 12인)·····	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3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상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해석하여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최초의 신탁사 승소 사례
- [공정거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그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과제
- [조세]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 할당관세 적용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사 강화에 대비해야
- [공정거래]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 관련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 [금융] 영국 SM&CR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국내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시사점
- [소송] 40년이 넘는 사실혼 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의사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모빌리티]**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통신(TMT)]**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경기 안심 부동산」 출시 기념행사 개최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 농지법 위반 시에도 충분한 자진 처분 기간 및 유예 기회 부여 중 - 올해 농지 거래량은 소폭 증가, 실거래가격 하락 폭은 둔화	2026-09-10
-------	---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농지를 ‘곧바로 처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며, 자진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 대상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종전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임. 또한 이행강제금은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1년에는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바 있음

2.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사실상 멈추고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

농지 거래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실거래가격 하락 폭은 둔화되었음.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이지만, 2025년 대비 2026년 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 5.3%에 비해 둔화되었음. 현재까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줄어들었다거나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출처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3. 농지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전부 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정을 구분하여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 등을 노리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처분보다는 농업인 고령화, 농촌 인력 부족 등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또한 전수조사를 계기로 그간 분산되어 있던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지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면밀히 살펴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고 밝힘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발표

- 요금제 유지기간 경과 알림 등 고지 개선
-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수립
-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 활성화
- 책임 판매를 위한 판매자 등록 확대
- 장려금을 활용한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등 불공정행위 근절

2026-09-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과 그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 규제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① 불공정 유통행위 근절

- 통신사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용자 지원금 차별을 지시·유도하는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유형별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모니터링, 신고 접수, 조사·제재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
- 특히 이동사·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 실시
- 다만 그간 정부 중심의 사후규제가 시장의 위반행위를 모두 적발·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전문가·통신사·제조사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건전한 시장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음

②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 실시

- 과거에는 지원금 총량과 과도한 지원금을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차별 발생 여부’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중점적으로 점검
-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간 보조금 차별 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

③ 이용자 정보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 이용자에게 지원금 정보와 요금제 이용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 가입 시 약정된 요금제 유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舊 공시지원금) 정보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에 대해서도 표준양식을 마련해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지원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

④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회복

- 이동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유통점이 계약서상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
- 이용자가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

⑤ 자율규제 활동 촉진과 지원

- 판매점 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의 책임 공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
- 미승낙(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2027-03-16 시행 예정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7-03-16 시행 예정
-------	------------------------	------------------

주얼리업의 등록과 갱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2027-03-16 시행 예정
-------	-------------------	------------------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이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7-09-16 시행 예정
-------	----------------------	------------------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7-03-16 시행 예정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망 확충 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12-16 시행 예정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

2027-01-01 시행 예정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7-03-16 시행 예정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갖춰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사업 인·허가 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8 시행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궤도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21479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8 시행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그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와 납부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27-03-16 시행 예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신설하며,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4. ~2026.10.26.

중기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 중기협동조합 설립 관련 출자금의 최저한도 하향 조정 (안 제7조)

- (전국조합) 8천만원 → 4천만원, (지방조합·사업조합·연합회) 4천만원 → 2천만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전화: 044-204-7432, 팩스: 044-204-7439)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6.09.18. ~2026.10.28.
-------	------------------------------	-----------------------------

모법 시행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유형별 인증기준을 설정함

①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설정 (안 제6조제2항 및 3항 개정)

② 자구 수정 (개정안 제3조, 제5조제1항제1호가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전화: 044-202-2969, 팩스: 044-861-5942)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6. ~2026.10.28.
-------	----------------	-----------------------------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전화: 044-201-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6.
~2026.10.26.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①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규정 (안 제21조제4항)
- ②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 (안 제25조제2호, 제7호, 제8호)
- ③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 (안 제25조의2제1항, 제3항)
- ④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제1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7.
~2026.10.2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3,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5.
~2026.10.26.

드론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사고·불법 비행 등으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나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비행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체, 조종자 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대상 확대 (안 제24조)

- 불법비행 및 사고 등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 등 체계적 드론 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

②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 추가 (안 제29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 승인에 관하여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mailto:국토교통부_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90, 팩스: 044-201-563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6.
~2026.10.06.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고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는 바, 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① 합병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 폐지 (안 제176조의5 제1항~제3항,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7 제3항 각호)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합병 등의 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산정방식을 삭제하고자 함

②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공시내용 보완 (안 제176조의5 제6항)

- 합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이사회 의견서에 작성하도록 규정함

③ 합병 등 추진시 외부평가항목 구체화 (안 제176조의5 제8항 및 제17항, 안 제176조의6 제4항)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외부평가 대상이 ‘합병 등의 가액’에서 ‘합병 등에 대한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항목을 구체화함

④ 계열사간 합병 등 추진시 외부평가기관 선정 절차 규정 삭제 (안 제176조의5 제10항)

- 계열사간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

⑤ 계열사간 합병 등 추진시 상대방인과의 이해관계 공시 구체화 (안 제176조의6 제18항)

-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열사간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구체화 (안 제176조의7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법인-주주 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대한 협의가 무산되는 경우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91, 팩스: 02-2100-2678\)](tel:02-2100-269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16.
~2026.10.26.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 인증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안 제34조의2)

- 인증심사 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등 인증 기준·방법 규정 정비
- 일정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인증의 사후관리 (안 제34조의5)

-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방법 및 기준 구체화하여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취약점 점검을 사후심사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③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제63조 별표2)

-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법 제32조의2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전화: 02-2100-3084, 팩스: 02-2100-3007\)](tel:02-2100-308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규명령기본법안(김형연의원 등 12인)	2026-09-15 발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행정이 복잡·전문화됨에 따라 법률이 행정부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 위임 범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제정 이후의 재검토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령과 제도에 분산되어 있어 법규명령의 제정부서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을 국민이 직접 재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독립적인 정비기구를 통한 사후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규명령의 제정·집행·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법규명령안의 위임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위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명령의 심사 및 정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0인)	2026-09-14 발의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 사업연도에 창출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은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창출능력을 초과하는 배당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 자본의 단기간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2026-09-14 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2026-09-14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담합을 직접 지시·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함. 또한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109조 및 제111조)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026-09-16 발의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보험 소비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동시에 보험상품의 판매, 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026-09-16 발의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 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45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2026-09-17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6-09-17 발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폐기,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폐기 등 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2026-09-18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등)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6-09-18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납품업자들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2 등)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2026-09-16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9-16 발의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환불 규정 등 이용 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6-09-17 발의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2026-09-18 발의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자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K-컬처 300조 시대 실현, 문화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세제·재정 우대,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현금형(현금 환급) 우대와 제작 인프라 투자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유치 경쟁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해외 제작 투자 유치와 지역 기반 창의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지식재산권 기반 부가가치 확산을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체계가 요구됨

이에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화하고 범정부 정책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제작 환급금 지급, 지식재산권 투자 정책금융 우대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 기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6-09-17 발의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2026-09-14 발의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0인)

2026-09-16 발의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6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2026-09-17 발의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섬.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된 발전설비도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전력산업에 관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통로가 마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과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력산업에 접목·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2026-09-17 발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 (안 제2조제11호·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2026-09-14 발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안태준의원 등 12인)

2026-09-16 발의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에는 제약이 있음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은 철거·신축에 비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필요한 공간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건축·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026-09-16 발의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9조)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2026-09-16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6-09-17 발의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2026-09-18 발의

최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조합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2026-09-18 발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 (안 제34조제1항)

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2026-09-14 발의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단순한 임금 수준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채용·배치·승진·임금·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에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를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정보통신 법안소위	9/21(월) 16: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2(화) 10:00	- 법안 의결,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9/21(월) 10:00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국토위	전체회의	9/21(월) 14:00	-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인사청문경과보고 서 채택의 건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21(월) 09:30	중남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21(월) 10:00	(대한민국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반도체&AI 산업 세미나	정진욱·안도걸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21(월) 14:00	(수도권 RE100 산단 지원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정책 토론회	권칠승·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22(화) 10:00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손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9/22(화) 10:00	공익법인 공익목적 투자와 주식기부 활성화 국회토론회	정태호·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22(화) 10:00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제도 개선	김석기·민병덕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강당
	9/22(화) 14:00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Part 2.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속세미나	김주영·김정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강당
	9/22(화) 18:00	모든 성장은 결국 전력에서 멈춘다	김용태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9/23(수) 15:00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온라인안전법 연속토론회 3	이주희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9/21(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2호(통권 제36호)	국회도서관	
	9/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9호(통권 제307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14(월)	「Data+」 제2026-14호(통권 제38호)	국회도서관	
	9/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8호(통권 제306호)		
	9/16(수)	「금주의 서평」 제2026-36호(통권 제795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14(월)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상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해석하여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최초의 신탁사 승소 사례
9/14(월)	공정거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그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과제
9/15(화)	조세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 할당관세 적용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사 강화에 대비해야
9/16(수)	공정거래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 관련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9/16(수)	금융	영국 SM&CR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국내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시사점
9/16(수)	소송	40년이 넘는 사실혼 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의사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9/16(수)	모빌리티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17(목)	방송통신(TMT)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경기 안심 부동산」 출시 기념행사 개최
9/18(금)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